

조선 후기 소설 유통의 정치경제적 배경 재론:

류준경, 김영민 교수 비평에 대한 반론

정 병 설*

I. 서론

문학 연구에 있어서 작품 향유의 배경은 기초 연구 부문에 해당한다. 문학은 작가와 아울러 독자가 있어야 하며, 독자는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 또 문학은 정보와 의론을 실어 나르는 매체이므로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기에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문학이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2016년도에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간행)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내 전공 분야인 조선시대 소설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생산과 유통이라는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연구이다. 종전에도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이 주제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에 본격적인 연구서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근래 소설 유통 부문은 물론 경제사, 정치사 분야에서도 연구에 큰 진척이 있어서,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편년사와 문집 자료들이 디지털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쉽게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적 연구에 도전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연구를 미룰 수도 없다고도 여겼다.

연구 결과는 내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종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내 책의 핵심적 주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 후기 소설 유통의 수준은 양적으로 보아도 굉장하지만, 유통방식으로 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도 놀라워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유통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 조선 사회를 소설 등 서적이 대규모로 유통되던 정보 유통의 혁명기로 보면서, 이 시기에 한반도에 정보 유통의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비록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는 새 차가 아닌 낡은 차였지만, 19세기 말 서구의 충격 이후 그 길 위를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실은 새 차가 달리게 되면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속히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조선 소설 유통의 낙후성에 대한 원인 문제이다. 조선의 소설 유통은 18세기를 넘어서 19세기에 이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혁명적 시기에 들어갔지만, 이는 유럽은 물론 인접 동아시아 지역과 비교해도 낙후한 것이다. 조선 소설 유통 낙후성의 원인은 종전에는 대개 경제적 환경에서 찾았는데, 나는 이 책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엄격한 사상과 정보의 통제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 후기 소설 유통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서는 책을 내기 전에 소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했지만, 유통 낙후성의 원인 부분은 책 초고를 완성하면서까지도 현재의 결론처럼 생각하지 못했다. 소설 유통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인구, 문해율, 종이값, 시장 등을 조사하면서, 경제적 요인은 저발전의 원인으로서는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정보와 사상의 통제가 우선 요인임을 알았다.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출판이 불법일 정도로 출판에 제약이 컸고, 그렇게 통제되는 환경에서 소설이 성장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종전의 소설 연구는 물론 문학사, 출판사, 사상사 등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의견이다. 책이 출간되자 먼저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류준경 교수가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혁명성」(『인문논총』 7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11)이라는 비평문을 제출했고, 나는 즉각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게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오프라인에서 토론의 장이 열렸는데, 2018년 2월 7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류준경(한문학), 김영민(정치학), 구범진(동양사), 옥영정(문헌학), 전상욱(국문학) 교수와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이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김영민 교수가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일본비평』(19, 2018.8)에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라는 비평문을 게재했는데, 여기서 김 교수는 지난 토론 내용을 보완하여 비평을 가했다. 김 교수의 비평문은 조선시대 국가성격론에 초점을 맞추어 내 책 외에도 이언진을 둘러싼 박희병, 김명호 교수의 논쟁을 함께 다루었다. 이글은 이 두 편의 비평문에 대한 반론으로 제출한다.

II. 류준경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

류준경 교수의 비평문은 전체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과 5절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되고, 2절에서는 내 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3절에서는 유통 상황에 대한 논의에 대해 비평했고, 4절에서는 낙후된 유통 상황의 원인에 대해 논했다. 류 교수는 관련 분야 전공자답게 고전소설의 존재 및 연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평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나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내었다. 다만 자료 해석과 의미 부여에서 시각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우선 내 책 제1부의 결론부에 있는 책 전체 요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조선시대의 소설유통은 극도로 엄격한 정치적 통제와 유교의 반중상주의적 이념으로 인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에 놓여 있어서, 인접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출판의 수준이나 규모가 영세하기 그지없었다. 소설의 내용 또한 지배이념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소설이 독서 대중에 미친 영향은 중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았고, 어쩌면 더 심대했으리라 여겨진다. 배우기 쉬운 문자인 한글의 저변이 한문이나 일본글 가나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정치적 제약과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설 독서의 저변은 크게 넓어졌고, 더불어 그것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국적 유통망이 구축되었다. (정병설, 앞의 책, 139-140쪽)

나는 조선의 소설 유통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낮았다고 평가하면서, 그렇지만 18세기를 넘어서 19세기에 이르면 소설 출판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것은 전대에 비하면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엄청난 양의 소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후기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내용은 유교의 사상적 이념적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엄격한 정치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내 책의 핵심적 견해에 대해 류 교수는 하나하나 비판을 가했다.

먼저 조선 후기 정보 유통이 과연 혁명적 수준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현상을 두고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물컵의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다고 할 수도 있고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소설 유통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을 두고 혁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현상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세부를 찬찬히 따져보기로 한다.

류 교수는 문해율에 대해서부터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해율은 소설 유통에 있어서는 잠재 독자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류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도 다룬 바 있는 1930년 국세조사 자료를 내가 “다른 논지로 활용”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 자료가 1890년 이전 출생 여성의 문맹률을 94%로 나타내기에 소설의 여성독자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류 교수가 말한 자신의 논문은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로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은 주독자층을 여성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작품이며, 고전소설 전체에서도 여성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독자를 여성에 한정할 수는 없다. 남성들이 소설의 독자로 또 작가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 독자가 여성에 제한된다고 보면 잠재적 소설 독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남성까지 넓혀서 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1890년 이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전체 남성의 근 절반에 해당하는 45%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남녀를 합쳐서 말하면 잠재 독자층의 비율이 20~30%에 이른다. 나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19세기 조선 인구를 대략 천오백만 남짓으로 볼 때, 그 가운데 삼사백만이 한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전체 문해자 중에 칠팔십만이 여성일 것으로 추산하였다.

나는 잠재적 독자층을 파악함과 아울러 소설 유통의 총량을 계산했는데, 19세기 중반 천 오백만 남짓의 인구 중에 삼십여만 명 인구를 지닌 “서울에 최소 십만 권 이상의 소설이 유통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수십만의 소설 책이 유통”되었다고 보았다. 기록과 자료의 제한으로 매우 거친 추산이지만 종전에 ‘많다’ ‘적다’ 정도로 표현한 것에 비해 한 발 성큼 나간 견해라고 자부한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책의 소설 유통은 현대의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지만, 책이 귀한 전근대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것이다. 당시 소설은 돌려서 읽거나 낭독하는 일이 많기에 실제 이 정도 수의 소설책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요즘의 수백만 권보다 훨씬 막중한 것일 수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소설책을 통해 전국이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혁명적’이라고 했다.

류 교수는 유통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필사가 아닌 출판된 소설로서의 이른바 방각본소설은 19세기 중후반에 집중 간행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이 제작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소설 출판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 책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지만,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말고 그것으로 당대의 존재 양상을 추정하라는 것이다. 여성에 관한 기록이 남성에 관한 기록에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조선시대 여성의 수가 남성의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모두들 소중하게 여기는 족보는 백 권이 만들어지면 백 년이 지나도 별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소설은 그 가치와 대접이 전혀 달라서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보고나면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일이 많다. 소설은 백 권을 찍어서 백 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다.

류 교수의 말처럼 방각본소설은 남아 있는 것만으로 보면 19세기 중후반에 집중 간행되었고 이후에는 새 판이 더 활발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소설 출판과 유통의 부진으로 보는 것은 소설의 유통 특성과 소설유통사를 간과한 것이다. 19세기 초반 이전의 방각본소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거의 망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20세기 이후에는 활자본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방각본소설을 찍을 필요가 없었다. 19세기 중후반에 간행된 오래된 방각본소설이 거의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금방 버려지는 소

설책을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어를 알기 위해 수집했기에 다행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류 교수는 또 세책소설의 유통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는데, 「언문책목록」에 기록된 책의 전체 책 수를 오천 책으로 추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설사 삼천 책으로 추산한다고 해도 전체 유통 소설 총수에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찌 되었든 한두 부분에 대해 류 교수처럼 이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근대 이전에 이미 놀라운 양의 소설이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조선 후기에 상당한 잠재적 소설 독자층이 있었고, 실제 엄청난 양의 소설이 유통된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전국적인 유통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소설 유통에 전국적 유통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큰 문맹률 차이, 경관과 완관의 해당 지역 유통 가능성을 가지고, “전국적 유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도 했고, “전국적으로 크게 유통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의 비판에 충분히 동의하는 것은 ‘확인’할 정도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크게 유통되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에 우리 학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지역적 유통설 역시 전국적 유통설과 똑같이 그것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자 했을 뿐이다. 둘 다 학적 가설에 불과하지만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따지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 유통설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시장 통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서울과 지역의 소설이 완전히 고립되어 유통되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는 지역을 넘어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전국적 유통설을 방증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7세기 말 『삼국지연의』가 독자가 희소한 제주도에서 판각되었다는 것, 널리 읽힌 한문본 『구운몽』이 서울이 아닌 나주와 전주 지역에서만 판각되었다는 것, 최초의 방각본소설 기록이 방각본소설의 생산지인 서울이나 전주가 아닌 함천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 함천 지역 각수가 전주에서 방각본소설 제작에 참여한 것, 경관과 완관 소설이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상보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 근대가 시작되어 소설이 처음 활자본으로 출간될 때부터 지방에 발매소를 둔 것 등이다. 이런 방증 논거들은 지역적 유통설로는 해명하기 어려

운 것이다.

나는 한국이 근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설 유통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지만, 전체 역사를 보면 이런 변화는 유럽은 물론 인접 중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도 더디고 낙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주요한 원인을 정치제도적인 차원에서 찾았다. 조선 왕조의 강력한 사상 통제로 출판과 유통이 후진적인 수준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교수는 조선 후기 “출판이 융성하지 못하고, 소설의 내용이 유교적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전제 왕조 체제의 억압적 사상 통제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하면서, “유교적 지배 이념을 사회적 가치로 이해하고 ‘향유’하려던 당대 사회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본다.”고 했다.出版的 부진과 획일적 사상이 통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조선시대에 유교를 벗어난 다른 사상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유교 이념에 벗어난 주장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를 유교가 조선 사회에 뿌리를 잘 내렸던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유교는 임금부터 심지어 천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상과 이념이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해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견이 없지 않은데도 그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압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실제로 유교 일색의 사회에서 이미 불교적 저술은 심심치 않게 나왔고, 이는 유교 사회에서 일정하게 용인한 부분이었으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는 천주교 관련 저술이 필사 또는 출간되었는데, 이는 즉각 탄압을 받았다. 천주교는 18세기 말 본격적으로 포교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세례 신자만 만 명에 육박하는 급성장을 했고, 1800년대 초 이후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 신자들 상당수가 박해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반에는 세례 신자의 수가 만오천 명에 이르렀다. 천주교 포교를 보면 유교 사상이 조선 사회에 뿌리를 잘 내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유교 이념이 잘 받아들여졌기에 유교 이념 일색의 소설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내 책에서는 조선이 동시기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사상 통제 의 정도가 심하고 가혹했음을 밝혔는데, 조선에서는 민간의 출판은 기본적인

로 불법이라고 했다. 약간이라도 체제의 논리와 이념에 저촉될 수 있는 저술이라면 유포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사상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III. 김영민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

김영민 교수의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라는 비평문은 전적으로 내 책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근년에 있었던 조선 후기 시인 이언진을 둘러싼 박희병, 김명호 교수의 비평을 아울러 다루고 있으며,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와 국문학자 이윤석 교수의 논저를 논의에 끌어들이고 있다.¹⁾ 박희병 교수의 『저항과 아만』 『나는 골목길 부처다』 등의 논저에 대해 김명호 교수가 「이언진과 우상전」이라는 논문으로 반론을 제기하자 박희병 교수가 「호동거실의 반체제성」이라는 반박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김영민 교수는 이들 논저들을 국가론 또는 국가성격론으로 묶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논저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책은 물론, 다른 논저들도 국가론을 핵심으로 다룬 것이 아니다. 다만 김 교수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국가론을 일정하게 전제하고 있다. 연구자로서 작품 해석의 바탕이 되는 국가 체제에 대해 일정한 상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국가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7절로 구성된 그의 비평문 중에 앞의 4절은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정리한 부분이다. 1절 ‘머리말’에서 국문학자들의 조선 국가 이해를 “조선시대 중앙의 정치권력은 관료기구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했고 군주, 관료, 지배 이데올로기는 긴장 없이 하나의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었다.”(196쪽)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5절에서 그것을 전제(專制)국가론 또는 동

1) 송호근, 이윤석 두 교수의 저서는 내 책을 비평하기 위해 동원된 것들이다. 그런데 김 교수는 비평문 202쪽 등에서 계속 송호근과 이윤석의 책을 필자 저서의 선행연구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선후가 섞여 있다. 송호근의 책은 소설유통에 관한 내 선행논문을 주요하게 참고했고, 이윤석은 동시기에 오랫동안 나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다.

양전제주의론으로 수렴되는 주장이라고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비평을 시작한다.

그는 조선을 과연 전제국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마이클 만(Michael Mann)의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al power)이라는 개념을 끌어온다. “전제권력이란 국가의 권력을 담지한 정치행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정치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로 자의적인지를 의미한다. 반면 기반권력이란 국가권력이 지방의 각 부분까지 어느 정도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²⁾ 이 개념들을 가지고 조선이 이 양쪽 모두에서 강력한 국가였는지 살피고자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조선이 양쪽 모두에서 약한 국가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은 임금이 국가를 자의적 통제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도로나 검열 등의 감시망, 그리고 시장 제도 등도 허술했다고 했다. 개인이나 하부 집단 역시 국가에 도전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전제권력과 기반권력이 모두 약한 조선을 크론의 개념에 따라 최소(minimalist) 국가에 가깝다고 보았다.³⁾ 이제 김 교수의 주장을 그의 논의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국문학자들의 국가론부터 살펴보자. 사실 국문학자들은 자기 글에서 국가론을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으므로, 이들 논저에서 국가론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김 교수의 요약은 선행논자들이 동의하기에는 너무 거칠다. 김 교수는 국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국가를 전제국가라고 하면서, 그 성격을 “군주, 관료, 지배 이데올로기는 긴장 없이 하나의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요약했다. 국문학자들이 전제국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권의 실질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권력 단위 간에 긴장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면, 나도 물론 다른 분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체제가 긴장이 없는 곳이 있었는가? 나찌나 제국주의 일본 등 어떤 강력한 전제체제에도 긴장 없는 곳이 없다. 하물

2) Michael Mann,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s and Result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 Archives* 25(2), 1984.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 후기 국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18, 2쪽에서 재인용.

3) Patricia Crone, *Pre-Industrial Societies: Anatomy of the Pre-Modern World*, Oneworld Publications, 1989, p.49.

며 전근대 조선이야 두 말이 필요없다.

김 교수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전제국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제권력과 기반권력의 두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전제권력과 기반권력이 강하고 단단한 국가를 전제국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이 모두가 동의하는 개념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이다. 전제권력과 기반권력이 늘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제권력은 강하지만 기반권력은 약할 수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근대의 절대왕정이나 후진국의 독재권력은 전제권력은 강력해도 기반권력은 약할 수 있다. 김 교수가 인용한 크론의 최소(minimalist) 국가도 기반권력이 약한 전근대 지배체제를 주로 가리키고 있다. 개념을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최소 국가 중에도 전제국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제국가의 개념이 전제권력과 기반권력이 모두 강한 것을 가리킨다면, 국문학자들의 암묵적으로 전제한 바 전제국가는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나 역시 조선은 전제권력은 강하지만 기반권력은 약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마 박희병, 김명호 두 분의 국문학자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 김 교수는 상대의 연구를 잘못 요약한 데서 논의를 출발한 듯하다. 아래에 전제권력에 대해서는 김 교수의 견해에 대해 반론을 펼 것이고, 기반권력은 내 의견을 잘못 읽은 것이니 보충 의견을 개진한다.

1. 전제권력의 문제

김 교수는 국문학자들에게 조선을 전제국가로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제권력과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논박해보라고 한다. 첫째 군약신강(君弱臣強), 둘째 성리학의 군주권 제약, 셋째 규범의 군주권 제약. 풀어서 말하면, 조선의 통치에 대해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고 묘사한 술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이념과 법률 등 규범으로 군주권을 제약하려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통치권의 제약을 받은 약한 군주를 어떻게 전제군주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김 교수는 조선의 전제권력이 강하지 않다는 증거로 영조 때의 역모 사건을 들었다. “실로 숙종 이후 조선의 군주 중에서 ‘전제적’이라는 표

현에 부합하는 압도적인 정치권력을 향유한 군주는 드물다.”고 하면서, “조선 후기 군주 중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향유했다고 알려진 영조조차도,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역모 사건을 겪은 군주 중의 한 명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역모 사건을 취조한 기록인 『추안급국안』은 영조 재위 시기에는 83건의 역모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자신이 지도한 이하경 선생의 박사논문을 인용하였다.

김 교수는 『추안급국안』에서 만난 83건 ‘역모 사건’을 통해 조선의 군주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이고자 했지만, 이는 실상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다. 『추안급국안』은 조정에서 심문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는 주로 국가 중대사건이 취급된다. 역모, 반역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의 역모 개념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지금 반역이라고 하면 칼을 들고 궁궐을 향해 무리지어 가는 그런 행동을 떠올리고 역모는 그런 반역을 모의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조선에서 사용한 반역이나 역모는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해당 박사논문 49쪽에는 83건 사건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표가 있는데, 11건이 반란 모의고, 4건은 반역자를 돌보거나 비호한 것이라 하고, 가장 많은 것은 임금에 기분 나쁘게 한 상소 등을 올린 범상부도(犯上不法)이다. 이것이 39건이다. 범상부도는 임금 앞에서 불경한 언행을 했거나 조정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권력 구도에 대해 논하는 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그런 말을 들었거나, 아니 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범상부도이고 역모가 된다. 예를 들어 심의지는 영조 앞에서 임금이 꺼리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쓴 뒤주를 ‘어떤 물건[一物]을 아시냐’며 거론했다고 하여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영조실록』 1771년 8월 3일 조). 이런 것이 영조 시대 반역, 역모의 실상이다. 이 밖에 어사 사칭, 방화, 절도 등이 모두 추국장에서 다루어졌다. 김 교수가 영조 때의 역모 83건이라고 본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역모가 아니며, 역모라고 한 것도 꼼꼼히 따져 보면 대다수는 모의의 흔적이 약한, 당쟁의 와중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적지 않다. 장장 53년의 영조 통치기를 통틀어 군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실질적인 역모, 모반, 반역, 반란이라고 할 만한 것은 1728년의 무신란 하나에 불과하다. 1755년의 을해옥사(나주패서사건)나 1771년의 명기집략 사건 등을 보면, 영조가 아주 작은 불만과 실수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가혹하게 통치권을 사용했는지 볼 수 있다.⁴⁾

김 교수가 조선을 전제국가로 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거가 전혀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해명을 요구한 군주권에 대한 종전 일부의 시각 또한 과장적이거나 부적절하다. 먼저 군약신강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조선 군주권의 실상을 면밀히 살핀 다음 명명한 말인지, 아니면 조선시대 일반에 사용된 말인지,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 사용된 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의 용례를 하나하나 분석할 여유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쟁의 와중에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기 위해, 또는 임금의 군주권의 약화를 말하며 군주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 쓴 말이다. 신강주약(臣強主弱) 등으로도 표현된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회자된 사건 하나를 들어보자. 숙종이 즉위한 이듬해 남인 오시수가 사신으로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청나라 역관에게서 들었다면서 이 말을 옮긴 일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 조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는데, 14세에 즉위한 어린 임금 숙종을 송시열, 김수항 등 서인 쪽 노신하들이 혼든다고 하면서 상대당을 공격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았다. 이바람에 결국 오시수는 사형을 당했다. 요컨대 이 말은 조선 군주권의 실상을 드러낸 객관적인 술어가 아니며 조선의 전시기 또는 대부분의 시기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을 일부 학자들이 분별없이 조선시대 왕권의 실상인 것처럼 사용해 왔다. 조선 왕권이 정말 약했는지 보자면 따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김 교수는 조선의 임금은 이념과 규범에 큰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조선의 임금은 이런 요소에 제약을 받는 한편 동시에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법으로 보면 조선의 국법에 임금을 구속하는 조항은 없다.⁵⁾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도 먼저 한 일은 아들을 세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세자는 소조(小朝)라고 불리는 작은 임금이니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으니 먼저 폐세자를 하고 다음에 사형에 처한 것이다. 또 임금 역시 유교 이념에 제약을 받지만, 유교의 최고 이념 가운데 하나인 충(忠)이야 임금으로서는

4) 전지는 『한중록』(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51쪽)에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고, 후자는 비평의 대상인 된 내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5) 이현창, 「조선왕조의 통치원리」, 『한국정치연구』 27-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84쪽.

받기만 하면 그만이니 이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임금이 지켜야 할 다른 중요 규범인 효(孝)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하들이 간여할 일이 없다.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법과 이념에 구애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웠던 것이다. 아무런 법과 이념의 제약도 없는 나라만이 전제국가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조선은 겉으로는 군신공치(君臣共治)나 민본(民本)을 내세우니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임금의 자의적 판단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통하는 권력이다. 임금이 자신이 수호해야 할 이념의 근간만 흔들지 않으면 임금의 통치권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행사되었고 보호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에서 왕성을 다 내주고 의주까지 도망한 선조도 돌아와서 다시 왕좌에 앉았고,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도 인조는 왕권을 이을 수 있었다. 그런 나라가 조선이다. 임금은 어떤 실책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국가가 조선인데, 통치권에 있어서 부분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전제국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것은 전제국가의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교수가 영조의 사례를 대표로 들었으니 마지막으로 영조 전제권의 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771년 2월 영조가 별안간 궁성호위령이라는 일종의 위수령을 내렸다. 이유는 사도세자의 서자들이 자기들 분수에 맞지 않는 탈것을 탔다는 것이다. 왕손들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정말 이것이 위수령의 이유일까 싶다. 이런 엄청난 사태가 고작 왕손들이 분수를 어긴 행동했다고 나올 일인가. 그런데 『한중록』을 보면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궁궐 후원에서 탄 밤을 흥봉환이 사도세자의 서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이유라고 했다. 권신 흥봉환이 서외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손들과 결탁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영조가 할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밤 때문에 위수령이 발동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소한 단서가 큰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곳이 영조의 조선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분명치 않은 이유, 사소한 이유로 언제나 신하들이 사형을 당하고 숙청되는 국가가 조선이었다.

김 교수의 말처럼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바로 조선을 전제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전달되고 시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보면 전제권력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다. 앞의 심의지의 경우에도 임금의 사형처분이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토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유사한 일도 임금에 따라 과정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다. 유사한 사상 탄압 사건인데도, 종종 때의 『설공찬전』 사건은 조정의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반면 영조 때의 『명기집략』 사건 때는 토의라고는 거의 없었다. 토의를 거쳐 결정하는 임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임금도 얼마든지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다. 조선은 임금의 자의적 통치권이 강한 편에 속하는 전제국가로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2. 기반권력의 문제

김 교수는 조선의 기반권력이 취약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열과 사상 통제 시스템의 부재와 시장의 미발달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반대 위치에서 주장을 펼친 것처럼 말했다. 앞 절의 인용문에서도 나오지만, 내 책 곳곳에서 조선의 낮은 경제적 수준과 출판의 미발달을 지적했고 아울러 검열 시스템의 부재를 말했다. 다만 검열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사상 통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엄격하고 혹독한 통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 없이도 사상은 충분히 혹독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상은 전파를 추구한다. 그러니 널리 전파하자면 숨어서는 할 수 없고, 엄격한 탄압이 있는 곳에서 출판 등의 표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는 “실로 동시대 조선보다 더 엄격한 출판 통제(와 국가권력)의 역사를 가진 중국과 일본에서는 훨씬 다양한 내용을 가진 소설이 출간되고 매우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조선 소설의 사상적 획일성이 엄격한 통제로 인한 것이라는 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자 했다. 조선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인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중국이나 일본보다 사상적 획일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말한 ‘조선보다 더 엄격한 중국과 일본의 출판 통제’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내가 공부한 바로는 한국이 더욱 엄격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기처럼 특정 시기에 출판 통제가 강화되었을 때 출판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명나라 중기와 말기에는 출판이 크게 일어났고, 다시 청나라에 금서

를 정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국가 근본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 제한된 것이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내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막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여 검열에 걸려도 수감형이나 유배형이 고작이었다.⁶⁾ 조선 역시 임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억압의 강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엄혹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설공찬전』처럼 중국이나 일본이라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환혼기(還魂記) 류의 소설책조차 필화사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명기집략』처럼 방대한 역사책에 한 줄 왕조와 관련된 오류가 섞였다고 해서 그것을 유통하거나 소장한 사람까지 근 백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지 못했다. 완비된 시스템이 없이도 충분히 가혹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상 탄압이며 그것을 잘 구현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본다.⁷⁾

18,19세기 조선에서 천주교의 급격한 성장은 철저한 감시망과 엄격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기반권력이 강한 나라였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동시기 일본 천주교 포교를 보면 적어도 외적으로는 치밀한 탄압으로 인해 신자가 한 명도 없다고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늘어났고 19세기 중반에는 서울에 천주교 출판소까지 만들었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허술한 통치 체제였지만 그렇다고 천주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방할 수는 없었다. 조선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상이 공표되지 않게는 만들 수 있었던 나라였다.

조선은 군주권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기반권력은 취약하니 최소 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엄혹하게 통제되었지만 철저하고 치밀하게 통제된 국가는 아니기에 국가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했고, 한글소설도 그 한 예에 해당한다. 나는 불교서와 한글소설을 ‘출판의 사각지대’라고 명명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것들조차 어떤 계기로 문제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6) 정병설, 앞의 책, 93쪽.

7) 내 책에서는 “소설은 불교 관련 서적 등과 함께 조선시대 출판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9쪽)고 했다. 물론 한글소설은 정조의 문체만정에서 거론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은 국문학계의 상식이다. 굳이 김 교수가 230쪽 이후에서 그 부분에 힘을 기울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 230쪽 인용문에서 『중신록』을 거론하며 야사, 소설로 말하고 있지만, 『중신록』은 민간에서 편찬된 역사책이다. 현종 조 역사변무와 관련되어 인용한 것으로, 뒤에 『명기집략』 사건과도 연결된다. 소설 유통을 논하는 지점에 인용한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탄압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6절에서 조선시대 통치의 사각지대를 말했고, 아울러 통치에는 억압도 있고 저항도 있지만 사각지대처럼 그것을 넘어선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희병 교수와 김명호 교수는 이언진에 대해 ‘반체제적’이라고도 했고 ‘출구를 찾지 못한 울분’으로도 읽었다. 김영민 교수는 국문학자 두 분이 조선을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에 가두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은 섬세하게 읽으면 그런 이분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두 분 모두 자신의 연구를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에 가두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 역시 억압과 저항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를 거기에 가두지는 않는다. 인간과 사회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동적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다.

IV. 결론

나는 조선 왕조가 오백년이나 지속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유교 이념이 잘 받아들여서도 아니고 강력한 통치력이 작동해도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본다. 지배층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지배층이 너무도 약해서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약한 피지배층이 반역도 반란도 일으키지 못하고 이념의 굴레에 갇혀 살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조선을 지배한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깊이 뿌리내리고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념이 아무리 잘 받아들여진들 불만이 전혀 없을 수 없는데, 불만은 있어도 그 출구는 찾을 수 없었다. 불만의 출구를 막은 것이 바로 사상, 정보, 출판의 통제였다.

조선이 이처럼 ‘약한 나라’가 된 것은 중국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가 문자옥을 일으키며 조선을 길들여 왔는데, 조선은 중국의 패권과 사대 이념을 인정하면서 부국강병책을 적극적으로 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민중은 지배자의 엄혹한 통제를 받고 지배자는 다시 중국의 통제 속에 놓여 있으니, 강국으로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한다. 국가성격론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세세히 따져질 수 있기를 바란다.

류준경 교수와 김영민 교수 두 분의 비평은 논쟁 없는 우리 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류 교수의 치밀한 비평과 김 교수의 거대담론은 우리 학계의 문제 의식을 재점검하여 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실은 균열에서 흘러나온다고 믿고 있다. 일방의 주장보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진실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토론과 비평은 사실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참고문헌

-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류준경,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혁명성」, 『인문논총』 7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_____,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김영민,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일본비평』 (19, 서울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09.
- _____, 『나는 골목길 부처다』, 돌베개, 2010.
- _____, 「호동거실의 반체제성」. 『민족문화사연구』 63, 2017.
- 김명호, 「이언진과 우상진」, 『한국문화』 70,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 송호근,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1.
- 이윤석, 『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 후기 국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18.
- 이현창, 「조선왕조의 통치원리」, 『한국정치연구』 27-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 Patricia Crone, *Pre-Industrial Societies: Anatomy of the Pre-Modern World*, Oneworld Publications, 1989.